창사 63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광주매일TV
▶m.kjdaily.tv ▶m.kjdaily.com 광고문의 062)650-2070

제8022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kjdaily.com 2021년 9월 3일 금요일 (음력 7월 27일)

산발 감염 지속…광주, 코로나 확산세 무섭다

하루 42명 확진…외국인 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학교·병원·주점, 지인·가족 모임 등 전방위 감염 속출
여수·순천·나주·담양 등 신규 확진…외지인 접촉 주의

광주에서 코로나19 산발 감염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광산구 외국인 검사와 관련,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확산 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부분 밀집·밀접·밀폐 등 '3밀' 환경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1-2명만 걸려도 20-30명씩 대규모 집단 발생으로 이어진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32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4천164명으로 추가됐다.

이날 지역감염 확진자 30명(해외유입 2명) 중 13명은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선제 검사가 진행중인 외국인 관련 확진자다.

현재까지 광산구 소재 외국인 관련 확진자는 109명에 이른다. 시는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하자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행정 명령을 내렸다.

지난 8월 한 달간 외국인 확진자 수는 123명으로 전체 확진자(677명)의 18.4%를 차지했다. 지역 확진자10명 중 2명 가량은 외국인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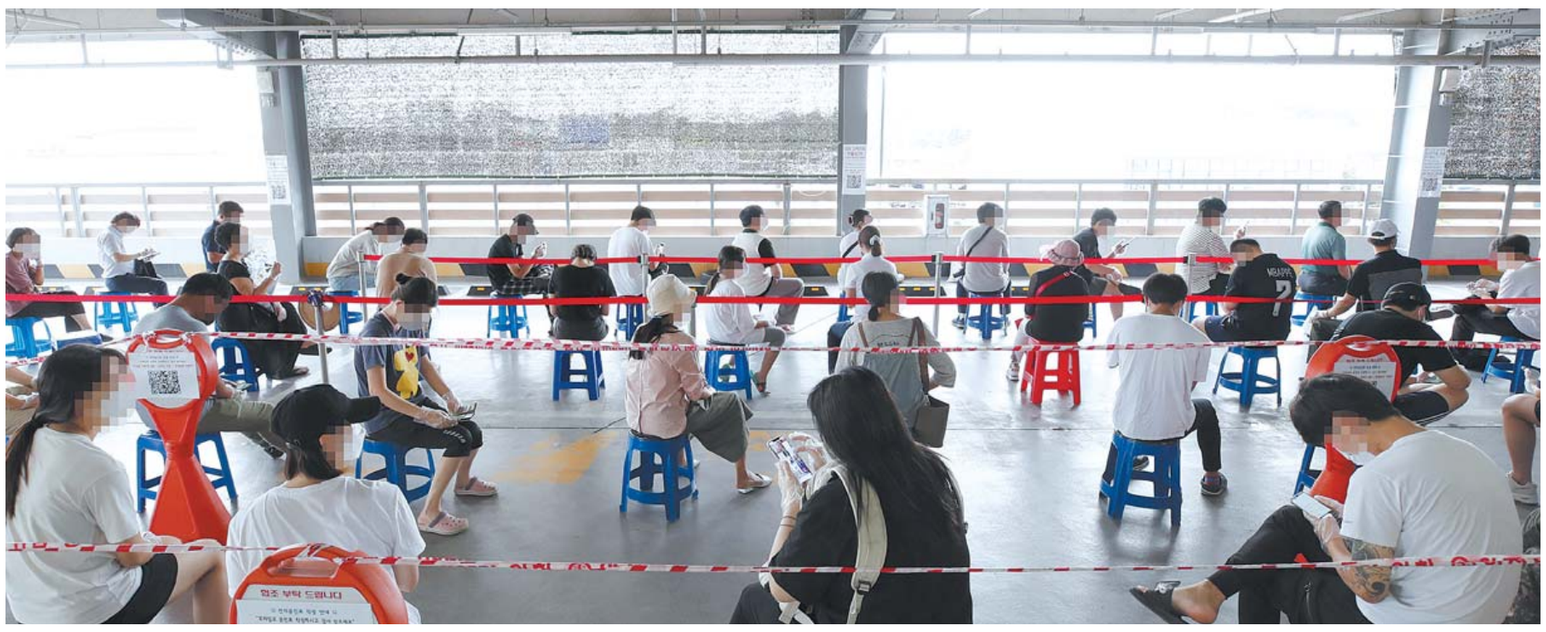
지역 내 의료기관과 학교, 주점 등에서 산발적 감염도 지속하고 있다. 북구 지인 모임 4명, 광산구 의료기관 1명 등 기존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이날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타시도 방문·접촉, 기 확진자 관련도 11명이 발생했다. 유증상 검사자는 1명이다.

최근 광주에서는 집단 생활을 하는 외국인을 비롯해 가족·지인 간 모임, 학교, 병원, 주점 등에서 산발 감염이 이어지면서 방역 당국의 전수 조사가 이뤄졌다.

전날 하루에만 42명의 확진자가 발생, 지난 1월 국제학교 관련 집단 감염 사례 이후 올해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쏟아졌다.

또 전날 광산구 한 물류센터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종사자 120명이 진단검사를 받고 종사자와 가족, 지인 등 9명이 확진됐다.



신규 확진 급증…북적이는 선별진료소 광주에서 올해 두 번째로 많은 하루 4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2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진단검사를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광산구 초등학교 2곳의 재학생도 가족간 감염으로 확진돼 학생, 교직원 등 147명이 검사를 받고 일부 원격 수업에 들어갔다.

전남에서는 여수·순천·나주·담양·장흥 등 5개 시·군에서 9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 이 중 4명이 유증상 검사를 통한 확진자로, 방역당국이 정확한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역학조사 중이다.

여수에서 발생한 1명의 확진자는 수도권 확진자 접촉, 담양·장흥·나주·순천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전남 기확진자의 가족과 지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최근 지역 거주 외국인과 타지역 관련 접촉자로 인한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증상이 있거나, 타지역 방문 또는 접촉자의 경우 필히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오승지·임후성 기자

金지사 "차기정부, 균형발전 제1과제 추진을"

전담부처 신설 촉구…지방 소멸 위기 극복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가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며 본격화하는 대선 정국 속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2일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정례조회에서 "국가 균형 발전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의제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 제1정책과제로 삼아 부총리급의 가칭 국가균형발전부를 전담 부처로 신설, 강력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균형 발전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제인데도 불구하고 어렵기 때문에 자꾸 늦어진 감이 있다"며 "경제를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 지방은 힘을 펼 수가 없다. 전국가적인 균형 발전이 이뤄지도록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하지 않으면 불균형 발전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국가 균형 발전의 2개 핵심 기조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개발을 꼽았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관련, 김 지사는 "경북도와 손잡고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전국 농어촌 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협력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공감을 끌어냈고 특히 정부가 지역 소멸 대응기금 1조원을 조성키로 하는 등 진일보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정부가 긍정적 신호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만큼 경북과 전북, 강원 등과 광역 협력을 통한 보다 강력한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역 개발에 대해 김 지사는 "전남이 주도해 추진하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은 광주와 부산, 울산, 경남 등 남부권 5개 시·도를 중심으로 광역 관광권을 형성해 남해안 관광시대를 열자는 것"이라며 "관광에서 경제 분야로까지 확대해 강력한 초광역협력사업으로 추진, 진정한 균형 발전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최근 광주매일신문과의 특별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가 너무 중앙·수도권 위주로 가는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 때가 있다"며 "그럼에도 중앙에 있는 분들은 당연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다. 다들 중앙집권적 사고 속에서 살아 지방 실정을 모른다. 그럴 때 참 답답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당시 김 지사는 또 "경쟁력이라는 미명 하에 서울, 수도권만 계속 좋아졌다. 균형 발전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지방도 고루 발전해야 나라가 화합이 되고 국민 통합이 된다"고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재정 기자

5·18조사위, 전두환 등에 대면조사 통보

노태우, 이희성, 황영시, 정호용 포함 5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 이하 '5·18조사위')는 2일 "전두환씨와 당시 신군부 중요인물 등 5인에 대하여 본격적인 대면조사를 위한 서한문을 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5·18조사위는 서한문 발송 이유에 대해 "1995-1997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도 불구하고 발포 명령자의 규명이나 암매장 등 중요 현안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고, 이에 대하여 지휘 책임이 있는 당시 군 지휘부 인사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부인과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실체적 진실 확보를 위해서 이들 중요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18조사위가 선정한 우선 1차 조사대상자는,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 전두환, 수도경비사령관 노태우, 계엄사령관 이희성, 육군참모차장 황영시, 특전사령관 정호용 등 5인이다.

이들은 조사가 시급한 고령자들로, 그동안 법정 진술과 출판물 등에서 5·18 관련 사실을 부인해왔다.

5·18조사위는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건강 등을 고려해 방문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만약 대상자들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동행명령장 발부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수사 요청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송선태 위원장은 "97년 4월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미완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중요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조사대상자들이 지금이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해, 용서와 화해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5·18조사위는 이들 중요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당시 군 지휘부 35명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Today

김경수의 광주땅 '최초' 이야기 5면
커지는 디지털 격차…노인 소외 6면
키워드로 보는 '명화' 이야기 14면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5세 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농지연금